#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1년 1월 2차 (2021.1.16.~ 1.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현안

###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1.1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12

### 정부,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 확보
-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 강화
-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1.1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158&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D%95%99%EB%8C%80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힘.**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연 840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비율 확대
  -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5%p 상향, 최대 90%까지 지원
- 서비스 안전성 및 이용 편의 제고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 3년으로 강화,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정보 제공
  - 주말·야간 등 긴급상황 시에 일시연계서비스 제공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1.1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21

## 여성가족부, 2019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3.6점으로 2018년(73.1점) 대비 0.5점 상승하였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6.4점으로 2018년(75.7점) 대비 0.7점 상승하는 등 매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5.3점↑), 육아휴직 성비(5.2점↑),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3.3점↑), 4급 이상 공무원 성비(3.2점↑) 전년 대비 크게 상승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1.2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23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가족정책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함.**

- 1인가구 증가('10년 23.9%→'19년 30.2%),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비중 감소('10년 37.0%→'19년 29.8%)등 가구규모 축소 및 가족형태 다양화
-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과제 설정
- 사회 각 분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거쳐 3월 중 국무회의 심의 · 확정 예정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1.2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24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힘.**

-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임.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장과 조직구성원의 책무 규정과 2차 피해 유형, 사건 처리 절차,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제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1.25.]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27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전국 96개 지정

**여성가족부는 2021년 신규지정 14개소, 재지정 7개소를 포함해 여성친화도시 전국 96개를 지정함.**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1.2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533

##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 구분 | 계류법안(발의자) | 제안일 | 내용 |
|---|---|---|---|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 2021-01-11 |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홍보사업을 포함하고, 이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도모(안 제10조 등) |
| 가족·돌봄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2021-01-12 |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안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4조의2 신설 등)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1인) | 2021-01-13 |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 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6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 | | | |
|---|---|---|---|
| 가족·돌봄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 2021-01-15 |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 강화(안 제16조제4항)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 2021-01-15 |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 2021-01-15 |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안 제2조, 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15조, 안 제18조 제1항)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 2021-01-15 | 임산부의 날부터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하고, 매년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 및 국민 인식 개선(안 제3조의2)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2021-01-15 |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등에게 주거 및 생계지원, 위기·자립 상담에 필요한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등)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2021-01-15 |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등) |
|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 2021-01-19 |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입양기관의 장이 함께 맡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지원을 해 입양 이후 관리에 있어 정부의 책임 강화(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4항 신설 등)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2021-01-19 |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안 제56조의2 신설 등) |

| | | | |
|---|---|---|---|
| 가족·돌봄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2021-01-19 |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 등)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2021-01-20 |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안 제46조의2 신설) |
| 다문화·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2021-01-15 |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등) |
| 건강·재생산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2021-01-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등).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 2021-01-14 | 「의료법」 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 제269조와 제70조를 삭제함으로써 합법적 낙태시술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함(안 제8조제4호).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 2021-01-14 |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삭제).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 2021-01-14 |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4호).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 2021-01-14 |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 2021-01-18 |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2항 신설).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 2021-01-19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의료·심리상담·산전관리·산후조리·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5 신설) |

| | | | |
|---|---|---|---|
| 폭력·안전 젠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2021-01-13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20인) | 2021-01-14 |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안 제34조제4항)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 2021-01-14 |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등이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폭행 또는 협박 시 처벌(안 제60조의2)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 2021-01-14 | 신고에 의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고, 면책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2021-01-14 |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안 제8조의3 신설 등)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1-01-15 |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되 그 기간이나 주기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4항).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 2021-01-18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자 하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이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9조의7제1항).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2021-01-18 |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숙식 제공, 피해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등) |

| | | | |
|---|---|---|---|
| 폭력·안전 젠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2021-01-19 |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등)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5인) | 2021-01-20 |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안 제44조의11 신설)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22인) | 2021-01-20 |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제12조제1항, 제61조제1항).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 2021-01-21 |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관리의 목적으로 피해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실효성 제고(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61조제1항)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21-01-22 |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차단 등 요청 범위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 불법정보와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을 위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불법정보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안 제32조의5, 제44조의2, 제44조의7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44조의9, 제44조의10 신설,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3까지, 제64조의3 신설, 제64조의5) |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 2021-01-22 | 기존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수적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해당하거나 가정폭력 범죄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지를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법원, 검찰청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으로 확인하게 하고(안 제8조제1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

| | | | |
|---|---|---|---|
| 폭력·<br>안전<br>젠더 | 아동복지법<br>일부개정법률안<br>(한병도의원 등 11인) | 2021-<br>01-22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며,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안 제22조, 제26조, 제29조의7, 제45조, 제47조 및 제53조의2)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br>등에 관한 특례법<br>일부개정법률안<br>(한병도의원 등 11인) | 2021-<br>01-22 |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안 제10조의5·제11조의3 신설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 제53조, 제55조의2) |

##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 과제명 | 날짜 | 매체명 | 제목 | 기사링크 |
|---|---|---|---|---|
| 숙련변화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 1.15 | 내일신문 | 성별임금격차 완화 요소 달라졌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3845 |
|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 1.18 | 서울경제 | '경력 단절' 내몰리는 워킹맘…퇴사 엄마 비율, 아빠의 2배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TQMFY |
| 제3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 1.21 | 노컷뉴스 | "기혼여성 중 비취업 여성 비율 지난해 '코로나'로 증가" | https://www.nocutnews.co.kr/news/5485582 |
| | 1.21 | 문화일보 | 작년 상반기 경단녀 150만명… 육아문제 퇴사 42%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101071203022002 |
| | 1.21 | 머니투데이 | 작년 상반기만 경단녀 150만명…10명 중 4명 '육아'로 퇴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109550764558 |
| | 1.21 | 뉴시스 | 작년 상반기 '경단녀' 150만명…91.3% 결혼·출산·육아로 퇴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0_0001312420&cID=10201&pID=10200 |
|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 1.22 | 서울신문 | 쇼트커트 하니 "연애 포기했어?"…여성 이직 부른 성차별 괴롭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1011019&wlog_tag3=naver |
| | 1.25 | 머니투데이 | "제가 커피를 왜 타요?"…부장에 대놓고 말한 신입, 당신 생각은?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513074610955 |

| | | | | |
|---|---|---|---|---|
|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연구(Ⅰ): 남녀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 | 1.25 | 내일신문 | 익명 온라인 상대, 오프 친구만큼 '친근'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4810 |
| 여성 건설근로자 취업현황과 정책방안 | 1.25 | 서울신문 | 女건설노동자 4년새 두 배 늘었는데, 48% "성희롱·차별에 일 그만뒀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6010006&wlog_tag3=naver |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 | 1.24 | 아시아경제 | 혈연·혼인 중심 가족 범위 바꾼다…아동학대·가정폭력 처벌 강화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2211373074313 |
| | 1.24 | 여성신문 | 1인가구 30% 돌파… 여가부, 새로운 가족정책 마련한다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62 |
| | 1.24 | 이투데이 | 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 포용할 가족정책 만든다" | https://www.etoday.co.kr/news/view/1987442 |
| | 1.24 | 아시아투데이 |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24010013444 |
| | 1.25 | EBS | 가족 정책, 혼인·혈연 중심에서 다양성 존중으로 |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440178/N |
| | 1.25 | 중앙일보 | 확 바뀌는 가족의 형태…1인가구·룸메도 가족 인정 추진 | https://news.joins.com/article/23977911 |
| | 1.25 | 연합뉴스 |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추진…자녀 성씨는 부모 협의로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5018900530?input=1195m |
| | 1.25 | 한국경제TV |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추진…성은 부모가 결정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250077&t=NN |
| | 1.25 | 서울신문 |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자녀 성은 부부 협의로 결정한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5000029&wlog_tag3=naver |
| | 1.25 | 뉴스1 | '비혼·동거'도 '가족'으로…법률혼·혈연 중심 가족 관련법 개정 추진 | https://www.news1.kr/articles/?4190809 |
| | 1.25 | YTN |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추진한다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251135018863 |
| | 1.25 | 경향신문 | 비혼·동거도 '가족'으로…다양한 가족 포용 나선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51028001&code=940100 |
| | 1.25 | 뉴시스 | '정상가족' 틀 깬다…정부, 비혼·동거 법적 가족 인정 추진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5_0001316295&cID=10201&pID=10200 |
| | 1.26 | 한겨레 | 비혼·동거도 '가족'으로…여가부 '가족' 개념 재정비한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0406.html#csidx5b2f09658acf7a6a99e8c4e46d117c1 |

| | | | | |
|---|---|---|---|---|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공청회 | 1.26 | KBS | 비혼·동거도 '가족'으로…자녀 성, 엄마·아빠 협의해 결정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3712&ref=A |
| | 1.26 | 국민일보 | 정인이 사건 후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가정폭력' 대책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65275&code=61172211&cp=nv |
| | 1.26 | 서울경제 | 여가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EL698CG |
| | 1.26 | 중앙일보 | 엄마·아빠 합의 땐, 엄마 성도 물려받게 된다…제도 변경 추진 | https://news.joins.com/article/23978377 |
| | 1.28 | 아시아경제 | "비혼도 동거도 가족으로 인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2714512229915 |
| 청년여성의 정치의식과 정치세력화 방안에 관한 연구 | 1.27 | 경향신문 | '정치권 인력난' 개선하려면, 청년 정치인 조기 육성·재정 지원…'인센티브' 강화로 관료 참여 독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72112005&code=910402 |

연구자 언론활동

| 날짜 | 매체명 | 제목 | 연구자명 | 기사링크 |
|---|---|---|---|---|
| 1.25 | 머니투데이 | 10.5만명 딥페이크 피해자, 70%는 일반인…"SNS 사진 훔쳐가" | 윤덕경 연구위원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108332565130 |
| 1.26 | | "이거 ○○○ 아냐?"…딥페이크 63%, '아는 여자' 사진 훔쳐썼다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516180759637 |

## 유관기관 연구동향

###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방안(서울연구원)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자아중심 관계망 분석방법을 활용해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하여, 이들의 사회적 고립 개선방안을 모색함.**

**참고자료**

-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01.21.] https://www.si.re.kr/node/64386